

‘탈냉전’ 시대 동아시아 북방학의 가능성^{*,**}

任佑卿^{***}

- | | |
|----------------------------|----------------------|
| I. 잊혀진 연대, 〈폴란드로 간 아이들〉 | IV. ‘냉전’/‘탈냉전’을 해체하기 |
| II. 1989년의 희망과 북방관계연구의 등장 | V. 방법으로서의 동아시아 북방학 |
| III. ‘탈냉전’ 이데올로기와 탈정치화의 정치 | |

• 국문초록

이른바 세계적 ‘탈냉전’ 시대, 과거로 물러나 버린 ‘냉전’ 시대의 역사화 작업이 진행되면서 최근 글로벌냉전사 연구가 활발하다. 이들은 냉전의 지역적 다양성과 주변의 행위주체성에 주목하면서 연구패러다임의 ‘지역적 전환’을 꾀하고, 냉전이 개인들의 일상적 문화적 층위에 미친 깊은 영향을 강조하면서 ‘문화적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냉전은 종식되었다’라는 역사적 명제와 ‘냉전은 종식되어야 한다’는 가치평가적 명제는 거의 모든 분야의 담론에 암묵적 전제를 이루고 있다. 또한 ‘냉전’이라는 패러다임 자체는 대결하는 양쪽 진영의 세력이 대등하다는 착시를 초래하고 나아가 냉전 대결의 양상을 양비론적 태도로 접근한다. ‘탈냉전’ 시대 이와 같은 냉전서사는 애초 사회주의적 이념이 자본주의를 극복하려는 아래로부터의 민주적 열망과 연계되어 있음을 간과하게 만들고, 그와 관련된 역사를 정리되어야 할 과거로 치부하거나 아예 역사의 지표 아래로 소거해 버렸다. 그런 점에서 본 논문은 1989년 제기되었던 북방관계연구 시론에 주목하고 ‘북방’이라는 개념과 범주에 기대어 실은 패권적 패러

* 이 글은 2019 북한학-한반도학 2차 학술회의의 발표문을 『대동문화연구』 특집에 맞춰 수정 보완한 것이다.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6A3A01023515).

***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조교수

다임인 ‘냉전’과 ‘탈냉전’ 패러다임 자체를 심문하고 해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남한의 이북으로서 북방이란 북한을 포함하여 중국, 몽골, 소련 및 동구의 공산권 국가들을 가리킨다. 북방은 사회주의적 이념과 실천의 연쇄, 그리고 상호연대를 통해 구축된 관계적 구성물이었다. 사회주의적 이념과 실천의 연쇄라는 점에서 북방 범주는 또한 남한과 일본, 대만, 베트남과 동남아시아의 혁명과 민족해방운동으로 확장된다. 그런 점에서 필자는 동아시아 북방학을 제안한다. 동아시아 북방학은 동아시아라는 지역을 토대로 북방의 트랜스내셔널한 연대의 사상과 실천을 교훈삼아 현실개혁의 동력으로 삼는 학술적 실천이며 지적 실험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동아시아 북방학, 냉전, 탈냉전 이데올로기, 공산권, 북한

I. 잊혀진 연대, <폴란드로 간 아이들>

2018년 추상미 감독의 다큐멘터리 <폴란드로 간 아이들>이 잔잔한 소동을 일으켰다. 영화는 한국전쟁시기 북한 정부가 폴란드에 양육을 위탁한 고아들과 그 아이들을 부모의 마음으로 키웠던 폴란드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주축으로 하되, 남한의 추상미와 탈북여성 이숨이 함께 과거의 이야기를 따라 낯선 폴란드를 취재하는 여정에서 남북의 상처를 보듬게 되는 로드서사 형식을 취한다. 그리고 얼마 전 아이를 낳은 추상미 감독 자신의 ‘엄마’로서의 시선과, 마찬가지로 고아들을 자식처럼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는 폴란드 선생님들의 절절한 사랑을 전면에 내세우며 보편적 휴머니즘에 호소한다. 영화는 폴란드로 간 아이들은 이념을 떠나 남북 모두의 문제이고 민족을 초월하여 고아를 만들어내는 인류 전쟁의 문제임을 부각시킨다. 그리고 “상처가 사랑이 되다”는 영화 홍보카피처럼, 70여 년 전 상처받은 이들의 공감과 연대가 보편적 사랑을 빚어냈듯이 여전히 ‘상처’ 속에 놓여 있는 남북한 역시 사랑의 치유가 필요함을 조용히 역설한다.

이 영화가 관객들의 시선을 더 끌 수 있었던 가장 큰 매력은 무엇보다 소재 자체의 신선함에 있었다. 영화가 홍보과정에서 “최초 공개 비밀실화!!!”라는 호기심유발 전략을 십분 활용한 것처럼 한국전쟁 고아들이 대규모로 폴란드로 보내진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남한에서 한국전쟁 고아들은 대부분 국내 고아원에 수용되거나 홀트재단 같은 민간단체들을 통해 외국으로 입양되었다. 그로부터 시작된 남한의 해외입양은 전쟁 후 점점 더 증가하여 ‘고아 수출국’이라는 오명까지 생겼으며, 그렇게 해외로 입양된 아이들의 미래는 그저 개인의 팔자나 운으로 치부되었다. 이것이 바로 남한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한국전쟁 고아들의 이야기이다. 그런데 <폴란드로 간 아이들>은 국가가 대규모로 위탁했다는 점, 그것도 냉전시대 적대국이었던 폴란드로 보내졌다는 점에서 한국인들의 냉전적 상식과는 전혀 다른 고아 이야기를 다룸으로써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했던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한국전쟁 고아들의 양육을 위탁한 나라는 사실 폴란드만이 아니었다.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은 폴란드 외에 중국과 몽골을 비롯한 동구권의 여러 국가들에 고아들을 대규모로 위탁했다.¹⁾

구분	1951~1959년
중국	26,816
루마니아	1,800
폴란드	1,500
체코슬로바키아	800
헝가리	232
불가리아	200
몽골	197
동독	600
계	32,145명

남한의 한국전쟁 고아가 4~5만 명이었다고 하는데, 북한도 그와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가정하면 적어도 북한 고아들의 3분의 2 이상이 중국을 비롯한 공산권 국가들로 보내졌던 것이다. 소련으로 간 아이들에 대한 연구는 전혀 없어 이 표에 반영하지 못했지만 그 숫자까지 합치면 총인원 수는 더 늘어날 것이다. 이들은 1951년 한국전쟁 당시부터 보내지기 시작했으며, 1956년 이래 공산권 내부의 여러 가지 변동과 북한 내부의 사정으로 인해 1959년 무렵 모두 북한으로 귀국초치되었다. 그 중에는 돌아오지 않거나 혹은 돌아오지 못했거나 혹은 그곳에서 유명을 달리한 아이들도 있었으니 그 운명이 다 똑같았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북한은 남한과 달리 국가차원에서 전쟁고아들의 운명을 책임지고자 했고, 그 결과 대규모의 아이들이 공산권 국가들에 분산되어 수년간 그야말로 ‘트랜스내셔널한’ 방식으로 양육되었음은 분명하고도 경이로운 사실이다. 70여 년 전 낯선 나라로 먼 길을 떠났

1) 이 표는 박종철·정은이, 「한국전쟁 이후 북한 재건을 위한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의 원조에 대한 검토」, 『중동유럽한국학회지』 15, 중동유럽한국학회, 2014; 손춘일, 「한국전쟁 발발 후 북한난민에 대한 중국정부의 정책」, 『국가전략』 21-3, 세종연구소, 2015; 이해성, 「폴란드에 남겨진 북한 전쟁고아의 자취를 찾아서」, 『중동유럽한국학회지』 15, 중동유럽한국학회, 2014 및 영화 〈폴란드로 간 아이들〉을 참고하여 필자가 정리한 것으로 정확하게 확인된 수치는 아님을 밝혀 둔다. 북한의 한국전쟁고아에 대해서는 중국, 폴란드, 헝가리 등 몇 개 국가의 상황에 대한 개별 연구가 초보적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유독 사회주의 중주국이었던 소련으로 보내진 고아들의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을 아이들의 여정이 남한 고아들의 그것과 너무나 달랐을 것임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남한은 물론이고 세계의 역사 어디에서 또 이런 장면을 찾아볼 수 있을까? 이런 특별한 역사가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전쟁 당사자인 북한에게 외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던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폴란드를 비롯한 공산권 국가들은 당시 왜 기꺼이 북한을 도왔던 걸까? 사실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육한다는 건 그들의 장거리 이동, 질병 진단과 치료, 주거, 의복, 식사, 교육은 물론이고 이들을 관리하기 위한 기타 행정비용까지 많은 재정을 필요로 하는 일이었다. 더구나 그들은 고아뿐만 아니라 북한재건에 필요한 수 만 명의 유학생도 육성해 주었고, 북한에 경제적, 기술적, 인적 방면의 직접 원조도 아끼지 않았다. 고아위탁양육은 그 원조 중 일부였을 뿐이다. 자유진영에 속한 남한 역시 전후 미국 원조의 덕을 토틈히 봤지만, 미국이 부유한 최강대국이었던 반면 당시 중국을 비롯한 동구권 국가들은 그 자신도 2차 대전의 전란 속에서 이제 막 복구를 시작한 어려운 처지의 국가들이었다는 점에서 그들의 원조는 더 각별하게 다가온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그 멀고도 낮은 동양의 아이들을 기꺼이 돕게 만든 걸까? 그리고 이런 몽클한 이야기를 우리는 그동안 왜 몰랐을까?

물론 철의 장막이니 죽의 장막이니 하는 동서진영의 경계가 엄존했던 냉전시대에 북한의 이야기가 남한에 알려지기는 어려웠을 터이다. 하지만 지난 세기말부터 이른바 세계적 ‘탈냉전’이 시작되었고 남한이 폴란드와 수교한지도 벌써 30년이나 되었는데, 폴란드로 간 한국전쟁 고아 이야기가 이제야 비로소 “최초” 운운하며 알려지게 되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 또 영화의 포스터에 폴란드로 간 아이들은 ‘한국전쟁의 고아들’이라고만 표시되었을 뿐 이야기의 주행위자였던 북한은 여전히 전면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은 왜인가? 사실 홍보과정에서 북한의 삭제는 다분히 의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이 영화의 메시지가 보편적 사랑과 치유라는 점과 짝을 이루는 것임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즉 둘 다 의도적인 탈정치화 장치인 것이다. ‘탈냉전’ 시대에도 남한에서는 북한(과 동구권)의 삭제를 통해서만 대중적 발화공간이 열린다는 사실, 혹은 감독이나 배급사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사실 자체는 ‘탈냉전’ 시대에도 여전히 냉전성의 전형적 징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물론 영화는 잊혀져 버린 냉전시대 공산주의 진영 내부의 탈민족적 연대의 기억을 “최초”로 대중 앞에 생생하게 드러냈다는 점만으로도 주목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그런 점에서 본 논문은 냉전은 종식되었다는 확신 자체가 왜 주류적 이데올로기인지, 그로 인해

‘탈냉전’ 시대에 만연하게 된 탈정치화의 정치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지적 실험으로서 ‘방법으로서의 동아시아 북방학’을 제안하고자 한다.

Ⅱ. 1989년의 희망과 북방관계연구의 등장

1980년대 후반 공산권 국가들 내부의 변혁열망이 증대하며 균열이 퍼지기 시작하고 소련의 개혁개방이 한창 추진될 당시, 남한에서 누구보다 먼저 그것을 기회로 포착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냉전적 세력이었던 군사정권이었다. 전두환 정권 시절 ‘북방정책’이란 말이 처음 등장한 데 이어 그 뒤를 이은 노태우 정권은 본격적으로 ‘북방정책’을 선언하고 행동으로 옮겼던 것이다. 그러자 한편에서는 여전히 북방 국가란 모두 북한의 동맹국 내지 우방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며 비판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시장경제적 셈법을 앞세워 북방정책을 환영했다. 노태우 정권은 1989년 공산권 국가로는 처음으로 헝가리, 폴란드와 연이어 관계정상화를 이루었고, 1990년에는 공산진영의 종주국 소련과도 수교를 함으로써 북방정책이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그 후로 남한은 모두 45개의 공산권 국가들과 수교했는데, 이것, 즉 북방외교야말로 남한 대중들에게 ‘탈냉전’적 변화를 가장 확실하게 체감하게 해준 사건이었다. 가로막혀 있던 냉전의 경계가 북방외교를 통해 무너지는 것을 보며 사람들은 남북왕래에 대한 꿈에 부풀기 시작했고, 희망찬 그러나 선부른 통일논의가 무성하게 전개되기 시작했다. 1989년은 혼란스럽지만 변화의 희망과 꿈이 커가던 해였고, ‘북방’은 그 희망의 한 가운데에 자리했다. ‘북방’은 통일과 평화와 번영을 지시하는 그야말로 ‘탈냉전’의 기표였다고 할 만하다.

남한에서 ‘북방정책’이란 말이 공식적으로 처음 쓰인 것은 1983년 6월 이범석 외무장관의 <선진조국의 창조를 위한 외교과제>라는 특강에서였다. 그러나 이때 북방은 중국과 소련만을 가리키는 것이었고 북방정책의 개념도 불분명했다.²⁾ 그 후 북방정책을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노태우는 1988년 2월 취임사에서 북방외교를 정식으로 천명했으며,³⁾ 7월에는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에서 북한

2) 조병선, 『북방정책의 실상과 전망』, 열음사, 1989, 27면.

과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공산국가와의 관계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범석이 지시했던 북방과 달리 박철언이 주도했던 노태우 정권의 북방정책(Nordpolitik)은 중국, 소련은 물론이고 동구의 공산국가까지 포함하는 것이었으며 때에 따라서는 북한까지 포함하기도 했다. 실제 북방외교가 시작된 1989년 당시만 해도 남한의 북방정책은 서독의 동방정책(Ostpolitik)과 비견되곤 했지만 여전히 엄밀한 학술적 의미의 개념과 범주가 명시된 것은 아니었던 듯하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북방정책에 대한 학술적 정립을 시도했는데, 30여 년이 지난 지금 되돌아 볼 때 그중에서도 북방 개념을 국제관계사적 방법론을 통해 역사적으로 파악하고자 했던 홍순호의 글이 눈길을 끈다.

홍순호는 1989년 「‘북방’개념에 대한 제관점: 한국북방정책의 국제관계사적 연구를 위한 방법론적 시론」⁴⁾을 발표하고 다음해 이를 「북방관계연구의 방법론적 시론」⁵⁾으로 수정보완하여 발표했다.⁶⁾ 그는 남한의 북방정책은 서독의 동방정책과 마찬가지로 “분단국의 통일외교정책으로서 소련 중심의 공산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지향하는 정책”이라고 정의했다. 하지만 그는 남한 북방정책의 국제관계사적 맥락이 브란트 동방정책이 처했던 국제관계사적 맥락과는 질적으로 다르며 훨씬 불리한 조건 속에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그는 당시 유행처럼 번지던 ‘북방정책’ 담론들이 북방에 대한 경제적 진출만을 과도하게 부각시키거나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것을 경계하고자 했다. 그가 볼 때 북방외교의 궁극적 목표는 바로 통일에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북한을 개방으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말대로 당시 북방정책은 국가보안법이나 공산권과의 접촉에 제해가 되는 제요인들이 그대로 방치되고 무엇보다 북한을 계속 적대시하는 사고가 잔존하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었고, 확실히 그런 상황은 북방정책의 목표와는 정반대로

3) “우리와 교류가 없던 저 대륙국가에도 국제협력의 통로를 넓게 하여 북방외교를 활발히 전개할 것입니다. 이념과 체제가 다른 이들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은 동아시아의 안정과 평화, 공동의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북방에의 이 외교적 통로는 또한 통일로 가는 길을 열어 줄 것입니다.” 1988년 2월25일 제13대 노태우 대통령 취임사 中.

4) 홍순호, 「‘북방’개념에 대한 제관점: 한국북방정책의 국제관계사적 연구를 위한 방법론적 시론」, 『사회과학논집』 9, 이화여대 법정대학, 1989.

5) 홍순호, 「북방관계연구의 방법론적 시론」, 『한국정치외교사논총』 6, 한국정치외교사학회, 1990.

6) 이 글은 한국정치외교사학회 지음, 『한국 북방관계의 정치외교사적 재조명』, 평민사, 1990의 서장으로 실렸다.

북한을 고립시킬 위험이 컸다.

흥미롭게도 홍순호는 이 같은 현상의 근본적 원인이 외교의 역사성과 철학성의 빈곤, 그리고 북방국가들에 대한 역사적 몰이해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렇다면 북한을 포함한 북방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방민족과의 역사적 접촉에서 드러난 우리의 대외의식과 외교사상 및 그들과의 관계사를 재인식하는 일이 시급해지는 것이다. 그가 북방개념의 정립과 국제관계사적 관점에 입각한 북방관계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한반도는 예부터 지정학적으로 북방세력과 해양세력의 사이 또는 경계에 존재했으며 현대에 들어서는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최전선이였다. 한반도 북방의 경계선은 주로 중국의 고대민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었는데, 1860년에 이르러 한반도의 북방관계가 근대적으로 재편되기 시작했다. 1860년 청나라와 러시아 사이의 북경조약에 따라 연해주 지역이 러시아로 할양되었기 때문이다. 이 때부터 한반도는 최초로 러시아라는 서양 대륙세력과 북방변경을 마주하게 되었고, 그 후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한반도의 가장 중요한 북방세력으로 작용했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 후 연합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한반도는 남북으로 강제분할되었고 북방경계선은 38선으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얼마 후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북방은 중국과 몽고 소련을 넘어 동구까지 확장되었는데, 6.25 전쟁 이후 휴전선이 38선을 대체하면서 북방경계선이 되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런데 홍순호가 38선 또는 휴전선을 북방경계선으로 보는 것은 엄밀히 말해 남한을 주체로 했을 때 성립하는 논리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의 북방경계선에 대한 더 일관성 있는 설명이 되려면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되면서 그 북방경계선도 둘이 되었다고 해야 한다. 하나는 남한의 북방경계선이고 또 하나는 한반도의 전통적 북방관계를 계승한 북한의 북방경계선이다. 홍순호는 이 부분을 건너뛰고 있어 일견 남한 중심주의적 사고처럼 보이는 것이다. 하지만 그 역시 38선과 휴전선을 “대한민국의 북방경계선”⁷⁾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그것을 의식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 듯하다. 사실 이 같은 의식적 모호성은 분단이라는 현실 속에서 남한을 행위주체로 놓는 사고의 필연적 결과일 것이다. 현실적으로 북방정책의 추진 주체는 북한이 아니라 남한이었기 때문이다.

7) 홍순호, 앞의 1990 논문, 23면.

오히려 의미심장한 점은 홍순호가 발화자로서의 남한의 위치를 분명히 드러내는 바로 그 지점에서 북한 역시 남한과 동등한 역사적 행위주체로서 인정된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그가 분단 이후 한반도의 북방관계는 북한이 주도한 반면 남한은 휴전선 이북의 북방국가들과 수 십 년간 불편한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⁸⁾고 설명하는데서 잘 드러난다. 다른 논자들과 달리 그는 북방정책의 대상으로서 북한을 북방이라는 범주 안에 분명히 자리매김할 뿐만 아니라 북한이야말로 분단 후 한반도에서 북방관계들의 주요 행위주체이자 중심이었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북방관계의 중심에 있는 북한을 고립시키거나 소거하는 북방정책은 자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다. 결국 남한 북방정책의 관건은 북한이고, 북방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하려면 북한을 중심으로 한 상호주체로서의 북방국가들의 역사 및 그들과 남한과의 관계를 일단 연구하고 이해하는 것, 즉 북방관계연구가 필수적인 것이 된다. 그런 점에서 홍순호의 북방관계연구는, 그가 의도했던 안 했든 상관없이, 과거 진영간 경쟁을 목표로 북방국가들을 타자화하던 정책차원의 공산권 연구와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연구를 노정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전자가 냉전시대의 적대적 연구였다면 후자는 바야흐로 도래하던 세계적 평화공존의 가능성과 한반도의 통일을 선취하기 위한 실천적이고 미래지향적 연구로서의 의미를 지녔던 것이다.

Ⅲ. ‘탈냉전’ 이데올로기와 탈정치화의 정치

하지만 아쉽게도 홍순호가 제안했던 북방관계연구가 제대로 시작도 되기 전에 세계는 너무 빨리 이른바 ‘탈냉전’의 시대로 들어서 버렸다. 홍순호의 글이 발표된 직후인 1990년 10월 동서독이 통일되고 1991년 12월 소비에트연방이 해체되면서 하루아침에 북한을 제외한 북방세계 자체가 사라져버린 것이다. 당시 홍순호가 북방국가들의 변화가능성을 예견했다 하더라도 그 중주국 소련의 해체가 이처럼 빨리 전면적으로 닥칠 것이라고는 짐작하지 못했음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북방을 해명하기 위해 이처럼 공을 들이지는 않았을 테니까. 아무튼 국제사회는 동서독의

8) 홍순호, 앞의 1990 논문, 24면.

통일과 소련의 해체를 곧장 세계냉전의 종식으로 받아들였다. 대결의 일방이 사라졌으니 그 대결이 종식되었다고 보는 것이나, 살아남은 다른 일방이 그 대결에서 이겼다고 보는 것은 상식적인 해석으로 여겨졌다. 1989년 남한의 가장 핫한 용어였던 ‘북방’ 역시 어느 사이엔가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남한은 여전히 북한이라는 사회주의 체제를 마주하고 있었음에도 덩달아 ‘탈냉전’ 시대로 휩쓸려간 것이다. 그리고 ‘북방’보다 더 핫한 세계적 ‘탈냉전’의 물결 속에서 홍순호가 제기했던 실천학으로서의 북방관계연구는 말 그대로 요절하고 말았다. ‘탈냉전’ 현실을 선취하기 위해 고안되었던 북방관계연구가 정작 ‘탈냉전’ 때문에 요절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이처럼 1988년부터 1991년까지 짧은 시간 남한을 설부른 희망에 들뜨게 했던 ‘북방열’을 뒤로 한 채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동구권 해체 이후’, ‘1989년 이후’와 같은 상투어들이 범람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는 ‘탈냉전’ 담론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탈냉전’이 단연 압도적인 학술적 유행어로 부상했고 북방 대신 ‘세계화’ 바람이 불었다. 학술계에서도 ‘탈냉전’을 바탕으로 유교경제론, 아시아적 가치론, 후기구조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 근대성과 탈근대론, 탈식민주의, 국민국가론과 탈민족주의, 동아시아론, 문화연구, 페미니즘, 생태주의 등 각종 이론과 담론이 연달아 봇물처럼 쏟아졌다. 물론 그 속에서 냉전시대의 금기였던 공산권 국가에 대한 연구가 급증하고 그간 한국근현대사에서 공백이었던 좌익의 역사적 발굴과 복원이 이루어졌으며 무엇보다 북한연구가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한국전쟁이나 북중관계, 중소관계 등에 대한 연구도 ‘탈냉전’이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활발하게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북방이라는 이름표를 달지는 않았다 해도 실질적으로는 북방연구가 활성화된 셈이다.

하지만 ‘탈냉전’ 시기 이들 북방연구는 홍순호가 제기했던 북방관계연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지점이 있다. 첫째는 홍순호의 북방관계연구에서 북방이 남한의 대화상대로서 현존하는 주제였다면 ‘탈냉전’ 시대 북방은 이미 사라져버린 과거로서 더 이상 대화의 주체가 아니라 역사화해야 할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이다. 협력하고 대화해야 할 주체로서의 상대가 이제 역사화의 대상으로 타자화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그것은 실천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상당한 차이를 낳을 수밖에 없다. 둘째는 북방관계연구에서 북한은 북방관계의 주축으로서 그 관계 안에서 파악된 데 반해 ‘탈냉전’ 시대 북한은 대개 고립된 것으로 파악된다. ‘탈냉전’ 시대에도 몰락하지

않은 현실사회주의 체제로서 북한은 매우 특수한 사례로 남았으며 심지어 ‘탈냉전’ 시대의 이단아, 문제아, 악의 축 등으로 취급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현실은 북방의 역사화 작업에도 반영되어, 홍순호처럼 북한을 북방관계 속의 역사적 상호주체, 또는 남한과 대등한 대화의 상대로 인식하기 어렵게 만든다. 나아가 그것은 냉전 시대 사회주의 진영 내부의 긴밀한 연대 속에서 구축된 북방세계, 그리고 그 일원으로서의 북한보다는 자꾸만 고립된 단위로서 북한의 특수성에 주목하게 만들고,⁹⁾ 심지어 부단히 북한을 괄호 치거나 간과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일차적으로 북방은 사라지고 북한만 남게 된 현실적 조건에서 기인하지만, 더 크게는 동구와 소련의 해체를 세계냉전의 종식으로 보는 ‘탈냉전’ 인식 자체에서 비롯된다. 주지하다시피 1990년대 초반 김영삼 정부가 내세웠던 ‘세계화’는 노태우 정권의 북방정책을 삼시간에 대체하며 일약 유행어가 되었고 이제는 굳이 ‘세계화’를 말하는 것이 촌스러울 정도로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되어 버렸다. 압도적으로 일원화된 자본주의의 세계화 추세 속에서 북방은 현실적으로 너무나 빠르게 소거되어 갔다. 무엇보다 ‘탈냉전’ 인식은 이 같은 현실을 추인하고 사회주의 진영에 대한 자본주의 세계의 승리를 기정사실화함으로써 동서 진영으로 나뉘었던 이원적 세계가 일원적 자본주의 세계로 재편되는 과정을 합법화했다. 이 과정에서 사회주의는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치부되고, 사회주의 역사 연구는 그것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증명하는 데 집중되었으며, 이른바 탈사회주의 또는 전환 연구는 대개 사회주의의 자본주의로의 전환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게 되었다.¹⁰⁾ 이처럼 자본주의 승리지 관점의 ‘탈냉전’ 인식에 기반한 사회주의 연구는 그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는 사회주의를 역사적 맥락으로부터 탈각시키고 승리자의 기준으로 재평가하고 평가절하하며 정형화하는 경향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러한 경향은 ‘탈냉전’ 시대 세계 각지에서 보편적으로 출현한 ‘탈정치화의 정치’ 현상과 긴밀하게 맞물려 있는데, 북방의 역사와 잔여적 현재마저 소거하고자 하는 ‘탈정치화의 정치’는 역으로 자본주의적 ‘탈냉전’ 인식을 더욱 강화시킨다. 북한의 고립화 또는 비가시화는 이와 같은 ‘탈냉전’ 시대 ‘탈정치화의 정치’의 한 결과이며, <폴란드로 간 아이

9) 조한범, 「비교사회주의 연구방법론의 활성화를 제안하며」, 『국제지역연구』 13-1,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2004.

10) 이에 대해 더 자세한 것은 권현익, 『또 하나의 냉전』, 민음사, 2013, 제2장 59~73면 참고.

들>의 이야기가 망각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다.

사실 ‘탈냉전’ 시대의 담론들이 승리자의 서사임은 많은 논자들에 의해 지적되어 온 바, 딱히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¹¹⁾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여전히 문제인 이유는 승리자 서사를 비판하는 논자들조차 많은 경우 ‘탈냉전’ 인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회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른바 좌파나 냉전연구자들조차 ‘탈냉전’의 핵심적 인식, 즉 냉전은 종식되었다는 전제를 의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오히려 많은 경우 과거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주류 신계몽지식인들이야말로 자본주의의 승리를 전제로 하는 ‘탈냉전’ 인식을 옹호하는 주요세력이기도 하다. 중국만 해도 그런데, 심지어 중국의 대표적 냉전연구자 셴즈화는 중미화해가 이루어진 1971년 이미 냉전은 끝났다고까지 말한다.¹²⁾

그러나 정말로 냉전은 끝났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어떤 냉전은 끝났지만 어떤 냉전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다행히 ‘아직은 탈냉전시대가 아니다’라는 주장은 전에도 한국을 비롯한 주변부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근래에는 특히 냉전연구자들에 의해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확산되는 추세다. 그중에서도 권현익은 기존 논의의 성과를 탁월하게 종합하면서도 ‘탈냉전’ 인식의 문제점을 가장 예리하고 전면적으로 제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류학자 권현익은 흔히 냉전의 기원은 복수형으로 다루어지는 데 반해 냉전의 종결은 단수형으로 취급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1989년 이후’ 혹은 ‘공산권 붕괴 이후’와 같은 관용구가 그 예라는 것이다. 나아가 그는 냉전은 상충하던 두 가지 현대성 중 자유주의의 승리로 받아들여지는데 이것에 동의하는 입장이든 반대하는 입장이든 모두 냉전의 종결이 사실이라는 전제와 확실성은 공유한다고 지적한다. 좌우를 막론하고 냉전이 종결됐다고 확신하는 이 통념은 무엇보다 냉전을 ‘상상의 전쟁’으로 보는 주류 서구중심적 정의에서 비롯된다. 미국과 서구 유럽국가들에게 냉전시대는 말 그대로 ‘오랜 평화’의 시기였던 것이다.

하지만 한국과 베트남 같은 냉전의 주변부에서 냉전은 결코 상상의 전쟁이 아닌 현실의 전쟁, 즉 열전으로 치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권현익은 어떤 지역에서 냉전이란 기껏해야 국가와 그 동맹국 사이의 일이거나 이념적 불일치의 문제거나 실존적 불안의 문제에 그쳤던 반면, 다른 지역에서 냉전은 정치적 폭력과 위협이 일상화되는

11) 베른트 슈퇴버, 『냉전이란 무엇인가』, 역사비평사, 2008.

12) 牛大勇·沈志華, 『冷戰與中國的周邊關係』, 北京: 世界知識出版社, 2004, 5면.

영속적 예외상황으로 경험되었으며 자연히 냉전은 국가와 정치적 차원만이 아니라 개인의 일상과 친밀성의 영역까지 지배하는 문제기도 했다고 지적한다.¹³⁾ 이처럼 냉전은 지역에 따라, 또 같은 지역이라도 서로 다른 층위나 범주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었고 심지어 지금도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냉전의 종결 역시 단일한 형태일 수 없음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권현익은 “누군가 냉전이 세계적으로 끝났다고 말할 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누구의 냉전이며 냉전의 어떤 측면인가라고 스스로에게 질문”¹⁴⁾해야 한다고 말한다. 나아가 “냉전의 끝이라는 이름이 붙은 역사적 전환점이 실은 아렌트가 말하는 ‘아직은 아닌 것’의 확장된 지평(즉 창조적인 정치 행위와 도덕적 상상을 향해 열려 있는 시공간의 영역)”¹⁵⁾임을 인지하고, 냉전이 어떻게 구체적인 장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천천히 끝나가고 있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냉전 종결의 다양성에 대한 권현익의 통찰은 그가 이른바 ‘탈냉전’ 시대 탈식민주의 담론이나 탈사회주의 연구, 그리고 문화적 세계화에 관한 담론들의 문제를 검토할 때 더욱 빛을 발한다. 그의 관찰에 따르면 이들 ‘탈냉전’ 시대 대표적 담론의 조류에는 공통적으로 양극시대의 역사가 빠져 있고, 또한 역사적으로 탈식민과정과 양극화과정은 서로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담론들 속에서 양자는 서로 다른 주제로 분리되어 다루어진다. 즉 탈식민 이론가들은 냉전을 상상의 전쟁으로 보는 주류 유럽 중심의 냉전개념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 때문에 탈식민 문화의 장에서 양극시대 역사의 자취를 배제해 버리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문화연구는 물론이고 이른바 냉전 문화론자들에게서도 발견된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탈식민 세계에서 반공주의 정치 는 수사적 문화적 상징만이 아니라 무차별적 폭력과 정치테러도 그 수단으로 적극 활용했는데, 냉전을 상상의 전쟁으로만 보는 이들 문화적 접근은 엄연히 존재했던 물리적 폭력의 문제를 단지 기호론적 문화이론으로만 접근한다는 것이다. 한편 탈사회주의 혹은 전환연구는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의 전환을 당연한 과정으로 전제하며 그 전환의 출발점을 바로 ‘냉전의 끝’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또 이 경우 냉전을 흔히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간 이념 및 체제의 대결로 보는데, 기본적으로

13) 권현익, 앞의 2013 책, 17~18면.

14) 권현익, 앞의 2013 책, 50면.

15) 권현익, 앞의 2013 책, 19면.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렇다하더라도 냉전시대 글로벌한 역사를 단지 추상적 이념의 대결로만 축소하는 것도 문화적 접근과 유사한 문제를 낳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권헌익의 통찰은 냉전 종식의 확실성에 대한 믿음이 이른바 ‘탈냉전’ 시대의 거의 모든 주류 이론과 비평에서 양극시대의 역사가 소거되거나 현실과 유리된 문화적 편향이 드러나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런 이유로 그는 ‘냉전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가 말하는 ‘냉전의 해체’란 우선 냉전사의 관점을 지정학적 역사에서 사회사적 역사로, 상징적 비유적 전쟁으로서의 냉전이라는 중심부적 이해에서 내전을 포함해 극히 폭력적 형식으로 구현된 주변부의 역사적 경험으로 이동하여 냉전사를 비교사회 문화연구의 주제로 제시하는 것이다. 그의 표현대로 하자면 그것은 냉전의 시간성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인 동시에 역사적 공간성에 대한 다원주의적 접근이기도 하다. 또한 ‘냉전의 해체’는 다양하고 지역적으로 특수한, 그리고 시간적으로 서서히 끝나가는 방식들을 다루는 것이고, 이는 냉전을 과거가 아닌 현재의 역사의 문제로서 참여관찰을 통해 이해해야 할 문제로 이해하는 것을 가리킨다. 또한 그에게 ‘냉전의 해체’란 양극시대 충돌의 희생자들과 그 주변의 고통스런 기억들을 글로벌 냉전사의 보이지 않는 곳으로부터 한가운데로 재배치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냉전이 끝났다는 주류적이고 지정학적이고 포괄적인 관념을 다루는 것 자체가 바로 ‘냉전의 해체’인 것이다.¹⁶⁾

요컨대 권헌익은 냉전의 종결이라는 이른바 ‘탈냉전’ 인식과 그에 기반한 담론들이 어떻게 다수의 역사적 현실과 다양한 인간경험으로 이루어진 글로벌 냉전의 역사와 상충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의 작업에서도 여실히 확인되는 바, ‘탈냉전’이란 결코 현실에 대한 객관적 반영이 아니라 ‘상상의 전쟁’이라는 중심부 논의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결과 민게 된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반도를 포함해 가장 뜨거운 열전을 겪었고 여전히 남북대결과 양안대결이 지속되고 있는 동아시아에서 현실과 ‘탈냉전’ 이데올로기의 간극은 더욱 극심했다. 그런 점에서 최근의 신냉전사 연구자들이 냉전의 지역적 다양성과 주변부의 행위주체성에 주목하면서 냉전연구의 ‘지역적 전환’을 꾀하는 것이나, 탈냉전 시대에 접어들어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냉전의 문화심리적 구조가 여전히 개인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냉전연구의 ‘문화적 전환’을 꾀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라 할 것이다.¹⁷⁾

16) ‘냉전의 해체’에 관한 논의는 권헌익, 앞의 2013 책, 19~23면 참고.

IV. ‘냉전’/‘탈냉전’을 해체하기

필자는 앞에서 ‘탈냉전’이라는 용법이 객관적 현실에 대한 반영이라기보다는 서구 중심의 역사적 경험과 시각에 기반하여 지난 30년간 세계의 사람들로 하여금 냉전의 종결을 확신하도록 만들어온 이데올로기였으며, 그것이 ‘탈냉전’ 시대 보편적인 ‘탈정치화의 정치’ 현상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고 말했다. 그런 점에서 ‘냉전의 해체’는 곧 이데올로기로서의 ‘탈냉전’을 해체하는 작업으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다. 즉 권현익이 말한대로 냉전의 종결이라는 주류 지정학적 관념 자체를 문제 삼고, 냉전사를 비교사회문화연구의 주제로 제시하며, 냉전을 과거가 아닌 현재의 역사로서 참여관찰을 통해 이해해야 하는 문제로 바라볼 때 냉전연구는 비로소 이데올로기 너머의 정치적 현실에 닿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탈냉전’ 시대 ‘탈정치화의 정치’를 문제 삼기에는 냉전의 다층성과 다양성 그리고 현재성에 주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보인다. 필자는 권현익을 비롯한 냉전연구의 성찰이 ‘탈냉전’ 시대 ‘탈정치화의 정치’를 문제삼는 데까지 갈 수 있으려면 보다 더 근원적인 질문, 즉 ‘냉전’이라는 개념 또는 패러다임 자체가 공정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더 보태야 한다고 본다. 물론 권현익도 “냉전이라는 발상과 그 안에 내재된 엄청난 의미론적 모순”에 대해 언급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호한 채로 다뤄진다.

‘냉전’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것은 1945년 조지 오웰이었다. 그가 ‘평화 없는 평화’라는 의미로 사용한 이 말은 1946년 미국 대통령 고문 바루크(Bernard Baruch)의 참모였던 스위프(Herbert B. Swope)에 의해 처음으로 미소간 대결을 지시하는 용어로 사용되었고, 1947년 6월 바루크에 의해 공식석상에서 처음 논의되었다. 그러나 이 말이 널리 회자되기 시작한 것은 저널리스트 리프먼(Walter Lippman)이 <뉴욕 헤럴드 트리뷴>에 글을 발표하고 <냉전, 미국대외정책 연구The Cold War: A Study on US Foreign Policy>라는 제목의 팜플릿을 출간한 후부터였다.¹⁷⁾ 애초 ‘냉전’은 미국의 정치권에서 그 대외정책을 가리키는 용어로 제시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흥미

17) 최근 냉전연구의 동향에 대해서는 백원담, 「냉전연구의 문화적·지역적 전환 문제」, 『중국현대문학』 75,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2015; 이병한, 「신냉전사: 중국현대사의 새 영역」, 『중국근현대사연구』 53, 중국근현대사학회, 2011 참고.

18) 베른트 슈퇴버, 앞의 2008 책, 16면.

롭게도 우리가 흔히 냉전시대라고 부르는 그 시대에 정작 대결의 일방이었던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는 ‘냉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엄밀한 것은 아니지만 필자가 중국의 학술데이터베이스인 CNKI를 검색해 보니, 1950년대 중국은 냉전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따옴표를 붙여 쓰고 있었다. 중국은 ‘냉전’이란 미국이 자신들의 자본확장과 전쟁추구를 은폐하기 위해 사용한 위장평화전략의 수사라고 비난했고, 그런 점에서 냉전에 따옴표를 붙였던 것이다. 그리고 개혁개방이 시작된 후 1980년대에 이르러서야 ‘냉전’에 붙은 따옴표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1990년대에 이르면 냉전이라는 단어의 등장횟수도 급격히 증가했다. 우리가 냉전시대라고 부르는 그 시기의 대결관계를 중국은 결코 ‘냉전’이라는 틀로 보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북방국가들은 ‘냉전’을 어떤 틀로 해석하고 이해했을까? ‘냉전’이라는 말이 미국에서 처음 회자되기 시작할 무렵 소련은 이에 대응하여 ‘양대진영론’을 정식화했다. 1947년 9월 코민포름 창립대회에서 안드레이 즈다노프는 세계가 이미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제국주의 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진영’으로 분화되었다고 선언한 것이다. 냉전이 양대 진영의 대결이라는 점에서 사람들은 즈다노프의 양대진영론을 소련의 냉전선언으로 보고 미소가 공히 냉전정책을 공식화했다고 보기도 한다. 그러나 사실 양대진영론은 진영대립에서 결코 전쟁(열전)을 배제하지 않으며 오히려 전쟁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냉전’ 개념과는 결이 다르다. 양대진영론은 이른바 자유주의 진영을 제국주의 진영으로 보고 그것을 전쟁세력이라고 간주하는 한편 사회주의 국가들은 민주진영이며 전쟁세력에 맞서는 평화세력이라고 규정한다. 제국주의 진영이 전쟁세력이라는 규정에는 자본주의는 그 속성상 제국주의로 발전할 수밖에 없으며 제국주의 국가간 전쟁은 불가피하다는 레닌의 제국주의론이 깔려 있다. 한편 민주진영이 평화세력이라고 말할 때 평화란 기본적으로 민주진영은 제국주의진영과 달리 전쟁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의미기도 하지만 제국주의 전쟁세력에 맞서는 저항전쟁은 광의의 평화로 간주할 수 있다는 양가적 개념을 포함한다. 이 양가성은 특히 여전히 민족해방전쟁을 치러야 했던 피압박 민족들에게서 더욱더 두드러졌다.

예컨대 그와 같은 평화개념의 양가성은 당시 항일전쟁에 승리를 거두고 내전에 돌입했던 중국공산당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1947년 즈다노프의 양대진영론이 발표되자 중국공산당은 이를 적극 지지하며 반제국주의 진영, 즉 민주진영의 단결을 주창했다. 물론 중공은 양대진영 중 평화세력인 민주진영의 편에 섰다. 하지만 당시 국민당과 본격적인 내전을 치르고 있던 상황에서 양대진영의 대결이란 현실적으로

평화적일 수도 없었고 평화적인 것으로 이해되기도 어려웠다. 내전에서 이기려면 오히려 전쟁세력에 맞서는 평화세력의 적극적 저항으로서의 전쟁은 제국주의에 반대하고 민족의 혁명과 진보¹⁹⁾를 위해 불가피한 과정이자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며 궁극적으로 정의로운 것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었다. 이는 양대진영론의 평화 개념 자체에 내포된 양가성의 표출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소련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평화공세와 실제 주변부 반제국주의 투쟁 속에서 재해석된 평화개념 사이의 간극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²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대진영론에 내포된 이 간극이 미국의 ‘냉전’ 패러다임과 ‘양대진영론’ 사이의 간극보다 크다고 하기는 어렵다. 요컨대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진영은 양극시대 진영 대립의 핵심을 제국주의와 반제국주의 간의 대립으로 보았으며, 비록 평화세력임을 자처했지만 반대로 반제국주의를 목표로 하는 전쟁과 폭력을 반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민족혁명과 해방이라는 명분 하에 주동적으로 전쟁을 발동하기도 했다. 북한이 한국전쟁을 조국해방전쟁이라 부른 것이나, 중국이 그것을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미국판으로 간주하고 중국의 참전을 미제국주의 침략에 저항하고 피억압민족인 조선을 돕기 위한 정의로운 국제주의의 실천으로 본 것도 ‘냉전’ 패러다임과는 사뭇 다른 접근법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냉전’ 시대 냉전연구는 양대진영론 속에 포함되어 있던 평화나 전쟁 개념의 다의성과 그 사이의 간극 그리고 그 안의 정치성을 ‘냉전’이라는 양극 패러다임 속에 평면화시킨다. ‘냉전’이라는 패러다임이 ‘양대진영론’ 속의 핵심적 정치, 즉 자본주의 및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이라는 정치의 문제를 지워버리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냉전’이라는 패러다임 자체에 내포된 ‘대등한 주체’들 간의

19) 예컨대 류샤오치는 1948년 발표한 〈국제주의와 민족주의를 논함(論國際主義與民族主義)〉에서 오늘날 어떤 민족도 “소련과 연합하든지 미국과 연합하든지 둘 중 한 편에 서야 한다. 그것은 애국과 매국의 경계이고 혁명과 반혁명의 경계이며, 어떤 민족이 진보할 것인지 퇴보할 것인지를 가르는 경계이다.”라고 말했다.

20) 청카이는 1940년대 말 세계적 평화서명운동이 중국에서 전개되는 과정을 분석하면서 중국의 평화개념과 세계적 평화운동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에 주목했다. 청카이, 「평화염원과 정치동원-1950년의 평화서명운동」, 『냉전 아시아의 탄생: 신중국과 한국전쟁』, 백원담·임우경 엮음, 문화과학사, 2013. 김태우 역시 소련과 유럽의 반전평화론과 동아시아의 해방전쟁론의 충돌에 대해 논한 바 있다. 김태우, 「냉전 초기 사회주의진영 내부의 전쟁·평화 담론의 충돌과 북한의 한국전쟁 인식 변화」, 『역사와 현실』 83, 한국역사연구회, 2012.

힘겨루기라는 전제, 또는 이미지의 힘이 크게 작용한다. ‘대등한 주체’라는 이미지는 애초 양자 사이에 존재하던 힘과 자원과 권력의 불평등이 양측의 대립을 초래했다는 사실 대신 그 결과인 양자의 대립 자체만 부각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양측 대립 속에 내재한 억압과 피억압, 착취와 피착취 같은 불평등의 문제와 그를 둘러싼 정치의 문제는 부차적인 것이 되거나 사라져 버린다. 애초 마르크스주의와 그 혁명이론이 자본주의를 극복하려는 아래로부터의 민주적 열망과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도 쉽게 간과된다. 그러나 자본의 탐욕과 제국주의적 불평등과 부정의에 대항하고자 했던 사회정의로서의 혁명의 시도들, 그들의 꿈과 미래에 대한 상상과 실천의 헌신들이 모두 이처럼 한낱 패권다툼의 일방으로만 취급되는 것은 과연 정의로운가?

‘대등한 주체들 간의 힘겨루기’라는 냉전 용법이 초래하는 또 하나의 효과는 바로 양대 진영이 똑같이 강했다는 착각이다. 당시 자유주의 진영은 비록 전쟁 피해를 입었다고는 하나 다수가 장기간의 식민지 개발로 부를 축적해온 강대국들이었고 특히 미국은 2차대전을 거치며 막대한 부를 축적한 데다 원자폭탄까지 보유한 세계 최강대국이었다. 반면 사회주의 진영의 국가들은 다수가 후진국이거나 구식민지였거나 세계대전이나 내전을 겪으며 내상을 크게 입은 국가들이었다. 심지어 사회주의 진영의 리더였던 소련도 상황이 크게 다른 것은 아니었다. 2차대전으로 소련 역시 강대국으로 부상한 것은 사실이지만 2차대전에서 가장 막심한 피해를 입은 것도 소련이었다. 게다가 따지고 보면 소련은 후발자본주의 러시아가 제국열강들과의 힘겨운 경쟁을 벌이던 와중에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함으로써 탄생한 신생국에 불과했다. 소련의 국력은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모두 미국과는 상대가 되지 않았다. 전후 소련이 자유주의 진영을 전쟁세력으로, 자신을 평화세력으로 규정하며 것처럼 평화공세를 펼쳤던 것도 실은 자신의 열세를 은폐하면서 미국과의 전쟁을 피하기 위한 전략의 일부였던 셈이다. 냉전시기 요란했던 미소간 체제경쟁에서 소련이 우주개발과 군사부문에서 미국을 앞선 적도 있지만 그것은 예외적인 순간에 불과하며, 훗날 소련과 동구권이 결국 해체된 것도 출발선에서부터 이미 노정되었던 양 진영 간 힘의 비대칭을 끝내 극복할 수 없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미소를 중심으로 한 양대 진영의 대결은 사실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 위의 경기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등한 주체들 간의 힘겨루기라는 ‘냉전’의 이미지는 기울어진 운동장은 가린 채 그 위에서 벌어지는 경기에만 초점을 맞추게 만든다. 게다가 ‘탈냉전’ 시대 승리자의 서사는 더더욱 그러하다. 이처럼 진영 간 역사적 힘의 비대칭성을

간과하는 것이 과연 공평한 것일까? 더구나 ‘탈냉전’ 시대에 냉전연구는 대결의 양상을 양비론적 태도로 취급하기까지 한다. 양비론적 접근은 무엇보다 냉전은 나쁜 것이고 종식되어야 한다는 암묵적 전제 위에 서 있다. 그리고 냉전은 종식되어야 한다는 양비론적 접근은 냉전의 종식 시대, 즉 ‘탈냉전’ 시대를 정당화하고 이는 다시 ‘탈냉전’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는 데로 나아간다. 자연스럽게 이는 다시 진영 대결은 애초 기울어진 운동장으로부터 비롯되었으며, 사회주의적 이상과 실천은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극복하려는 아래로부터의 민주적 열망과 연계되어 있음을 간과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는 겉으로 드러난 폭력만 보게 하고 그 폭력이 왜 발생했는지 그 정치에 대해서는 간과함으로써 폭력에 대해 근본적 성찰을 할 수 있는 기회까지 차단해 버리는 것이다. 그리하여 ‘탈냉전’ 시대 탈정치화는 또 한 번 깊어진다.

그런 점에서 냉전종식의 단수성을 문제 삼는 권헌익조차 ‘냉전은 종식되어야 한다’는 전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것은 펍이나 아쉬운 일이다. ‘냉전은 종식되어야 한다’는 가치평가적 명제는 어쩌면 ‘냉전은 종식되었다’는 역사적 명제보다도 더 단호한 확정어법 속에 갇혀 있는 듯하다. 그러나 그것이 설령 형편없는 선수들의 패배한 경기였다 하더라도, 애초 사회주의 이념과 그 실천으로서의 혁명, 나아가 사회주의 국가들간 연대의 궁극적 목표는 자본의 세계지배에 대한 저항과 극복에 있었다는 점까지 부정할 필요는 없을 터이다. 혹여 그 저항의 기운과 그들 사이의 횡적 연대의 실천을 ‘아래로부터의 냉전’이라고 볼 수는 없을까? 그리고 성공한 혁명 권력이 민족국가화할 때 세계적 민족국가시스템의 패권경쟁구도에 불가피하게 말려 들어가면서 ‘위로부터의 냉전’ 구조가 형성된 것이라고 본다면? 그렇게 보면 사회주의 진영이 해체됐다는 것은 결국 자본을 제어하는 기제로서의 사회주의적 민족국가 시스템, 즉 ‘위로부터의 냉전’이 무너졌음을 의미할 뿐, ‘아래로부터의 냉전’까지 모두 해체됐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식의 구분이 타당한지는 더 따져봐야겠지만, 사회주의 민족국가 시스템이 상당수 해체된 이후 자본주의시스템이 더 교묘하고 더 거대하고 더 탄력 있는 지구적 착취구조로 진화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그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안적 모색과 실천들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아래로부터의 냉전’을 발생시킨 근본원인이 사라지지 않는 한 ‘냉전’의 종결도 영원히 보류될 수밖에 없을 터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냉전의 종식’이라는 말 속에 두 개의 층위, 즉 ‘냉전은 종식되었다’는 역사적 판단과 ‘냉전은 종식되어야 한다’는 가치평가적 판단이 중첩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승리자의 역사 서술 속에서 이 두 층위는 서로 혼재하며 상호정당성을 강화하고 그것이 다시 승리자 서술을 합리화하는 순환 구조를 만들었으며, 이를 간과한 결과 그간의 냉전연구는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결과적으로 ‘탈냉전’ 이데올로기가 탈정치화를 부추기는 또 다른 정치로 작동하는 과정을 방관하거나 심지어 방조했음을 직시해야 한다. 권헌익이 말한 대로 누가 냉전이 세계적으로 종식됐다고 말할 때 “누구의 냉전이, 어떤 냉전이 종식되었는가”라고 물어야 할 뿐만 아니라, 누가 냉전이 종식되어야 한다고 말할 때 “냉전은 종식되어야만 하는 것인가”, “어떤 냉전이, 냉전의 어떤 차원이 종식되어야 하는가”라고 묻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지난 30여 년 간의 ‘탈냉전’ 이데올로기가 무엇을 탈정치화하고 있는지, 그것은 결국 누구의 이해를 대변하는지, 그리고 사라져간 역사로부터 우리가 더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은 무엇인지가 더 분명해질 것이다.

V. 방법으로서의 동아시아 북방학

지금까지 우리는 역사적으로나 가치평가적으로 모두 ‘냉전의 종식’을 확인하는 이른바 ‘탈냉전’ 인식이 왜 또 하나의 이데올로기인지, 그리고 그것이 지난 30여 년 간 세계적으로 만연하게 된 탈정치화 현상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거칠게 살펴보았다. 서두에서 거론한 <폴란드로 간 아이들>의 몽클한 이야기와 그들의 시대가 이른바 ‘탈냉전’ 시대에 쓰여진 역사에서 공백으로 존재했던 것도, 1989년 홍순호가 제기했던 ‘북방관계연구’가 것처럼 빨리 요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탈냉전’이라는 이데올로기가 형성되고 확산되는 과정에서 수반된 ‘북방 소거’의 일부였다고 할 수 있다. ‘냉전’이라는 용어는 그 탄생부터 그리고 ‘탈냉전’ 시대인 지금까지도 다분히 서구중심적일 뿐만 아니라 탈정치화를 부추긴다는 점에서 ‘탈냉전’ 이데올로기를 포함한 ‘냉전’ 패러다임은 적극적으로 해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탈)냉전의 해체가 ‘냉전’이라는 용어 자체의 폐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첫째, ‘냉전’은 과거 수십 년간 실제로 사용되면서 세계의 다양한 층면을 구성해 온 역사적 용어라는 점에서 자의적으로 폐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니와, 둘째, ‘냉전’이라는 말은 그

자체로 그것이 구성해 온 역사의 불균등성과 폭력성, 그리고 비대칭적 담론권력의 세계적 구조를 매우 직관적으로 떠올리게 해 준다는 점에서 여전히 역설적인 사용 가치를 지닌다. 중요한 것은 ‘냉전’을 다양한 시간과 층위를 가진 것으로 부단히 분절하고 해체하면서, 그것이 또 다시 이데올로기화 하지 않도록 심문하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 우선 ‘탈냉전’ 시대에 소거되었던 냉전의 일방, 즉 북방의 역사와 현재를 적극적으로 담론의 장 속으로 소환해야 한다. 여기서 북방이란 기본적으로 홍순호가 정의한대로 북한을 포함하여 중국, 몽골, 소련 및 동구의 공산권 국가들을 가리킨다. 전통적으로 공산권은 동방이라 불리지만 그것이 서유럽을 중심으로 한 명칭이라면 북방은 남한을 중심으로 한 명칭으로서 지역주체성을 드러내고 냉전연구의 지역적 전환을 시도하기 위한 명명이다. 또한 여기서 소환되는 북방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여전히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북한이나 비록 시장경제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사회주의 깃발을 내리지 않고 있는 중국은 물론이고, 이미 사회주의체제를 포기한 국가들이라 하더라도 사회주의적 잔여들은 서서히 끝나가며 여전히 현재를 구성하는 일부이자 미래의 역사라는 의미에서 그렇다.

또한 북방은 여기서 상호관계적 구성물로 파악된다. 그것은 사회주의 이념의 확산, 그 실천의 산물인 혁명들의 연쇄, 그리고 혁명주체들 간 상호연대가 북방을 구성하는 핵심영역이라는 말이기도 하다. 북한을 포함한 북방을 상호관계적 구성물로 파악하게 되면 ‘탈냉전’ 시대 북방의 소거에 따라 북한연구 자체가 사회주의 연구가 되어버린 남한의 고립된 북한학²¹⁾도 비로소 자연스럽게 비교사회주의적 시야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북방을 상호관계적 구성물로 파악하면 북방의 범주는 단지 국민국가를 단위로 하는 경계에 머무르지 않고 심지어 사회주의적 이념과 실천의 연쇄와 관련된 모든 역사적 범주로까지 확대된다. 그렇게 보면 남한은 북한을 대상화하는 주체기도 하지만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남한 스스로 북방의 범주에 속하게 된다. 또 사회주의적 사상과 실천의 연쇄라는 측면에서 일본, 대만, 베트남과 동남아시아의 관련 역사까지 모두 북방 범주 속에 딸려오게 된다. 자연스럽게 북방은 동아시아라는 지역을 의미론적으로 품게 되는 것이다.

21) 조한범, 「비교사회주의 연구방법론의 활성화를 제안하며」, 『국제지역연구』 13-1,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2004.

위와 같은 북방의 범주 설정에 따라 필자는 그에 관한 학술적 실천을 동아시아 북방학이라 명명하고자 한다. 그렇다고 동아시아 북방학이 스스로 어떤 완결된 체계를 지닌 학문범주를 지향하는 것은 아니다. 굳이 말하자면 그것은 북방의 트랜스내셔널한 연대의 사상과 실천의 역사적 자원을 탐색하고 그 전통을 복원하여 현실개혁의 동력으로 삼는 학술적 실천 자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동아시아 북방학은 방법이자 시각이며 지적 실험으로서의 동아시아론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간 비판적 동아시아론이 동아시아를 하나의 단위로, 즉 통으로 사고하는 훈련을 해 온 것처럼 동아시아 북방학도 당장은 북방을 하나의 단위로 사고하는 훈련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 북방학이 실제로 어떤 새로운 사고의 길을 열어 줄 수 있을지 지금 당장 온전히 가늠하기는 불가능하다. 없던 길도 사람들이 많이 걸어가면 길이 된다는 루쉰의 말대로 그 길은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일 테니까.

참고문헌

- 권현익, 『또 하나의 냉전』, 민음사, 2013
- 베른트 슈퇴버, 『냉전이란 무엇인가』, 역사비평사, 2008
- 조병선, 『북방정책의 실상과 전망』, 열음사, 1989
- 牛大勇·沈志華, 『冷戰與中國的周邊關係』, 北京: 世界知識出版社, 2004
- 김태우, 「냉전 초기 사회주의진영 내부의 전쟁·평화 담론의 충돌과 북한의 한국전쟁 인식 변화」, 『역사와 현실』 83, 한국역사연구회, 2012
- 박종철·정은이, 「한국전쟁 이후 북한 재건을 위한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의 원조에 대한 검토」, 『중동유럽한국학회지』 15, 중동유럽한국학회, 2014
- 백원담, 「냉전연구의 문화적·지역적 전환 문제」, 『중국현대문학』 75,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2015
- 손춘일, 「한국전쟁 발발 후 북한난민에 대한 중국정부의 정책」, 『국가전략』 21-3, 세종연구소, 2015
- 이병한, 「신냉전사-중국현대사의 새 영역」, 『중국근현대사연구』 53, 중국근현대사학회, 2011
- 이해성, 「폴란드에 남겨진 북한 전쟁고아의 자취를 찾아서」, 『중동유럽한국학회지』 15, 중동유럽한국학회, 2014
- 조한범, 「비교사회주의 연구방법론의 활성화를 제안하며」, 『국제지역연구』 13-1,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2004
- 청카이, 「평화염원과 정치동원-1950년의 평화서명운동」, 『‘냉전’ 아시아의 탄생: 신중국과 한국전쟁』, 백원담·임우경 역음, 문화과학사, 2013
- 홍순호, 「북방관계연구의 방법론적 시론」, 『한국정치외교사논총』 6, 한국정치외교사학회, 1990

An Essay on the Northern Studies of East Asia in the “Post-Cold War” Era

Im, Woo-kyung

As the era of the so-called "post-cold war" has come, historicalization of the "cold war" era, which has already become a past, has been carried out, and research on global cold war history has been active recently. Noting the regional diversity of the Cold War and behavioral subjectivity of the periphery, they are trying to make a "local transformation" of research paradigm and they are trying to seek a "cultural transition" by emphasizing the deep impact the Cold War has had on individuals' daily and cultural strata. However, the historical premise of "The Cold War is over" and the valuation premise of "The Cold War should be over" are implicitly prefixed to discourse in almost every field. In addition, from the very beginning the paradigm of "Cold War" leads to the illusion that the forces of the opposing camps are equal, and furthermore, the two sides of the Cold War confrontation are all bad. Cold War narratives such as this one in the era of the "post-cold war" initially made us forget that socialist ideology was linked to democratic aspirations from below to overcome capitalism, and dismissed the history associated with it as a past that should be sorted out, or even wiped it out below historical indicators. In this regard, this paper notes the theory of Northern Relations Research, which was raised by Sunho Hong in 1989, and argues that the hegemonic paradigms "Cold War" and "Post-Cold War" paradigm itself need to be interrogated and deconstructed by raising the concept and category of “the North”. Here, the “North” means north of South Korea, referring to communist countries including North Korea, China, Mongolia, the Soviet Union,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The north was a chain of socialist ideologies and practices, and a relational construct built through mutual solidarity. Given that it is a chain of socialist ideologies and practices, the northern category also extends to revolutions and national liberation movements in South Korea and Japan, Taiwan, Vietnam and Southeast Asia. In this regard, I propose Northern Studies of East Asia.

‘탈냉전’ 시대 동아시아 북방학의 가능성

Key Words : Northern Studies of East Asia, Cold war, Post-Cold War ideology, North Korea, Communist bloc

